혁신도시 이전 문화 관련 기관 지역사업 저조

지역인재 의무 채용·일자리 창출·협력사업 등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예술위원회 실적 미흡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이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신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혁신도시 이전 후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사업, 지역인재 채용 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및 동반성장, 지역인재 채용, 산학협력사업을 포함한 지역인재 육성사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의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2014년에 이전한 이후 2017년 한 차례만 30.8%를 달성했다. 2015년에는 20%, 2016년은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

문화예술위원회는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2019년에 지역인재 22%를 채용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었다.

일자리 창출사업도 지난해와 올해 미취업 청년에게 5~6개월 동안 체험활동을 하는 '체험형 인턴' 6명을 운영한 것이 전부였다.

지역 기업, 대학 등과 협력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4년 동안 아무 사업도 추진하지 않다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업무협약 3건을 체결해 보여주기식 협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30%를 달성한 해가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20%, 2016년 7.1%, 2017년 12.5%, 2018년에는 23.5%에 그쳤다. 올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산업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지역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들이거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업들뿐이다"면서 "혁신도시 해당지역 지자체와 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들의 지역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면서 "이전 기관들이 정부에서 떨어지는 단순 지원사업 방식을 벗어나 해당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광태 완성차 대표 선정 시의회서 또 도마에

장연주 의원 "도덕성 논란" 지적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선정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은 15일 시정질문에서 "도덕성 논란이 있는 대표이사를 추천하고 노동계가 반발한 현대차 추천 이사를 임명해 법인 설립 첫 단추가 인선으로 불협화음을 빚었다"며 "시는 노사민정의 요구가 아닌 현대차에 끌려다녔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사 상생의 '광주형 일자리' 의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약해졌다. 노사 책임 경영을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하다"며 "시 조례에도 있고 노사 책임 경영이 되려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아직 안되는 데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법인은 주주 총회에 결정권이 있는데, 주주로 노동계가 참여하지 못한다"며 "일방적인 현대차의 입장으로만 가는 게 안타깝다. 노동계가 양보하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노동계의 이야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노동계가 '반노동적'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 노동이사제 도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일부 단체가 반대한다고 대표 임명을 검토해야 하나. 인간이라고 하는 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 만장일치로 임명한 사람을 바꾸라면 어떻게 하나"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법인을 설립하고 광주그린카진흥원에 광주시 파견 직원 10여명으로 사무실이 마련됐지만, 법인 설립 이전부터 논란을 빚은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 노동이사제 문제 등이 정리되지 못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풍 미탁 피해 해남·진도 의신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전남지역은 집중호우(최대 보성읍 305㎜)와 강한 바람(여수 간여암 33.4m/s)으로 전체 김 채묘시설 중 45%에 달한 4만5000여 책이 파손 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14일 현재 잠정집계한 피해액 기준으로 해남군 65억원, 진도군 의신면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등 수산증양식시설과 벼 도복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도민들께서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농·어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축제인 제28회 전남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제19회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15일 오전 영암군 영암읍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시의회 '부의장 비서' 요구…민간공원은 언급 안해

수행비서 충원 조직개편안 알맹이 없는 시정질문 일관

광주시의회 부의장들이 '부의장 수행비서'를 광주시에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시정질문 과정에 최근 검찰 수사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입을 다물어 '알맹이 없는 의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부의장에게 수행비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관용차 요구도 뒤따를 수 있어 광주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내년부터 7급 상당의 직원이 부의장을 수행하게 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최근 광주시에 올렸다. 부의장은 장재성·임미란 의원이다.

시의회는 "의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외부 행사에 부의장이 대신 참석하기 때문에 수행할 비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 의회 가운데 10개 의회에서 부의장이 수행 비서를 두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 광주시의회 의장은 6급 상당의 직원이 수행 비서를 맡고 있지만 부의장은 없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재 실·국별로 인력 증원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부의장 의전 비서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인공지능 집적 단지 조성 등 현안에 투입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전 인력 추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지난 1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시정질문 과정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의원은 과거 동료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되풀이해 지적했고, 황현택 시의원은 돌연 '이용섭 시장이 잘 생겼다는 말이 있어 기분이 좋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특히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 등이 검찰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시의원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닫고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과 관련, "시의원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도 읽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 초선 의원들이 많아 시당 차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도 매번 참석하는 시의원은 1~3명에 불과했다"면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의정 준비에 집중하지 않고 수행 비서 등 권리만 누리겠다면 다음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마륵동 탄약고 이전 군공항과 분리 추진돼야"

황현택 의원 "문제 해결" 촉구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로 지지부진한 마륵동 탄약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황현택(민주·서구4) 의원은 15일 시정 질문에서 "탄약고는 2018년까지 시설 공사를 끝내고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군 공항 이전과 연계·추진이라는 변수로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의 시행 기간이 2025년 12월 말로 변경돼 7년이나 늦춰져 사업 추진이 더디다"며 "이전을 서두르고 이전 예정 지역을 국제 문화·교육 지구 및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배후 지원 단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서구 마륵동 일대 36만㎡ 부지의 공군 탄약고를 서구 서창동, 광산구 신촌동 일대 206만㎡ 부지에 옮기는 것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 올 이용객 100만 돌파 무난할 듯

9월말 현재 72만명…83%↑ 중국·동남아 노선 확대 영향

중국, 동남아 등의 노선을 늘려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 이용객 70만명을 넘어섰다. 연말까지 3개월이 남아 있어 올 한 해 목표인 100만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 현재까지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7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만 명)보다 83.2%나 늘었다. 국내선 이용객이 17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어났고, 국제선은 55만 명으로 141.7%나 늘어 전국 15개 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일본 노선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노선이 이용객 상승세를 이끌었다. 10월부터 일본 후쿠오카 노선이 추가 중단되지만, 10월 중순 대체 노선으로 중국 최고 관광지인 장가계에 신규 취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해, 연길, 장가계, 도쿄, 오사카, 타이베이, 방콕, 다낭, 세부, 코타키나발루 등 10개 국제 노선이 운항하게 돼 이용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남도가 중국 산야, 괌, 동남아 등 신규 취항을 위해 각 항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어 국제선 다변화를 위한 추가 성과도 기대된다.

올해 목표인 100만명 달성을 위해 전라남도, 제주항공, KT&G가 공동으로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행계획 공모전을 추진 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